

독일분단의 기원에 대한 검토 : 알타회담 전후를 중심으로*

정태일** 충북대학교

김연희*** 충북대학교

논문요약

근대 국민국가의 성장은 원료공급과 시장개척을 위해 세력확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선 공업국가와 후발 공업국가 간에는 원료공급과 시장개척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체제가 성숙하지 못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의해서 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독일이 분할점령이 되었는데, 이에 독일분단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그 당시 전개되었던 국제회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일의 분단은 강한 독일이 주는 위협요인을 해소하고자 소련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알타회담 전후인 테헤란회담, 포츠담회담을 통해 확정되었다. 독일분단의 원인은 강한 독일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하려는 연합국들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나, 전후처리과정에서 강대국들의 패권안정화가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테헤란회담, 알타회담, 포츠담회담, 유럽자문위원회, 연합국통제위원회

* 이 논문은 한국정치사학회연구소·한국국회학회·10.18민주항쟁연구소가 2020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근대에 들어 국가는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다양한 정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민국가를 형성하였다. 국민국가는 산업화를 통해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자 원료공급과 시장개척을 위해 영토적 세력확장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뒤늦게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은 그들보다 먼저 산업화에서 성공한 국가들과의 원료공급과 시장개척을 위한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산업화와 동떨어진 국가를 대상으로 대규모 전쟁을 감행하였다.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유럽에서 선진 강대국과 후발 강대국 사이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다. 이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중심이 된 협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중심이 된 동맹국 사이에 시작되었으나 추후에 이탈리아와 일본, 미국이 협상국에 가입하였고, 오스만제국과 불가리아도 동맹국에 가입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협상국이 승리를 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많은 영토를 상실하였으며,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었고, 유럽과 서남아시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협상국을 중심으로 전쟁의 참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국제연맹을 탄생시켰지만 유럽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 부활인 독일의 나치즘 등이 발생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성장하면서 국제연맹에 의한 평화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의 연합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전체주의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1929년에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은 뉴딜정책을 실시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관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였다. 이에 자본주의적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았고,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재무장을 선언하였다. 한편, 일본은 대륙침략전쟁을 일으켜 만주지방을 점령한 다음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식민지를 가지지 못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대외침략으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1943년에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1945년에 독일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종결되었지만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으로 양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이 한국과 독일에게 분할점령 후 분단과정을 거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독일분단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그 당시 전개되었던 국제회담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을 알타회담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미국, 영국, 소련이 패전한 독일의 전후처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독일분단에 대한 연합국의 논의

1. 알타회담 이전 독일문제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은 미국과의 견해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전협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는 소련의 스탈린(Joseph Stalin)이 의심할 것을 두려워해 처음에는 영국의 사전협의를 거부하였으나 1941년 8월 14일에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의 처칠은 대서양의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Prince of Wales)에서 전후 연합국의 목표와 전후 질서에 대해 14개의 평화조약인 대서양헌장

(Atlantic Charter)¹⁾을 발표하였다.

대서양헌장에서 미국과 영국의 정상은 미국과 영국은 영토 획득이나 다른 목적이 없으며, 당사국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어긋나는 영토 변경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정상은 어떠한 형태의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나치독재가 멸망해도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국경선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서양헌장이 발표될 때까지도 해도 미국이나 영국은 독일을 분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대서양헌장에서 영국과 미국의 정상이 독일문제에 관해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다.

“양국은 나치 폭정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는, 모든 국가들에게 자기들 국경 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고, 또 전 세계의 국민들에게 공포와 궁핍에서 벗어나 자유 속에서 일생을 살 수 있게 해 줄 평화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²⁾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확산되자 소련에 의해 독일의 분할논의가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히틀러(Adolf Hitler)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자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를 구하고, 히틀러의 침략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였다. 히틀러는 1940년에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점령한 데 이어 1941년 6월에 파리까지 점령하여 유럽을 자신의 지배 속에 넣었지만 히틀러의 야심은 이에 끝나지 않고 소련으로 향하였다. 히틀러는 1939년 8월 23일에 소련과 체결한 불가침조약을 파기한 후 1941년 6월 22일에 소련을 공격하여 9월에 레닌그라드를 포위하였으나 소련의 혹독한 겨울 추위로 더 이상 진격

1) 대서양헌장은 세계평화와 국제협력의 도모 등을 천명하여 향후 연합국의 공동선언문과 국제연합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2)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84%9C%EC%96%91_%ED%97%8C%EC%9E%A5 (검색일: 2020/10/03).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소련군은 후방에서 전력을 재정비하여 독일군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 습격을 시작으로 미국을 공격하였고, 미국은 즉각적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여기에 1941년 12월 11일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에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쟁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영국과 소련은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도모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 이든(Anthony Eden) 영국 외무장관은 소련을 방문하여 동맹관계를 협의하였다. 그 당시 스탈린은 영국의 이든 장관에게 전쟁이 끝나게 될 경우에 독일과 체결할 강화조약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분할하여 약화시키자고 2차례나 제의하였다(김기동·정남기 1988, 38). 스탈린은 독일의 라인란트(Rhineland)와 바이에른(Bayern)을 각각 별도의 독립국가로 만들고, 동프로이센을 폴란드에게 넘겨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이든 장관은 스탈린의 제의가 대서양현장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영국은 유럽에서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독일이든 소련이든 한 나라가 유럽의 주도권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소련의 스탈린은 대서양현장이 소련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영국과 소련은 1942년 5월에 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독일에 대한 분할논의가 소련 스탈린의 제의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지만 1941년 말까지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은 독일의 분할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독일의 분할에 대한 논의는 1943년 10월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1943년 11월의 테헤란회담(Tehran Conference)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소련의 스탈린의 제의에 따라 1943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들이 모여 외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모스크바 외상회의(Moscow Conference)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장래 독일의 국경을 1937년 12월 31일 당시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와 쥬데텐 지역 등 그 동안 독일이 강제로 취득한 영토를 독일 영토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독일의 행정권도 새로 설치될 연합국 통제기구에 위임시키고, 독일의 군국주의와 나치주의를 제거할 뿐 아니라 전쟁에 이용될 수 있는 산업시설을 모두 파괴시키기로 결정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유럽자문 위원회(European Advisory Commission)를 설립하기로 한다.”³⁾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개국 외상회의 이후 1943년 11월 28일에서 12월 1일까지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이란의 테헤란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테헤란회담에서 소련의 스탈린은 독일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스탈린은 중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에 어떠한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거나 약소국들이 연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 다시 독일의 공격을 받게 된 소련은 독일을 철저히 약화시키기 않고서는 소련의 안전이 위태로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 루스벨트는 독일을 5개의 나라로 나누자고 제의하면서 루르지역과 자르지역을 국제기구에서 관리하자고 하였다(권오중·나인호 2006, 49). 또한 테헤란회담에서는 독일의 동부 국경선 문제도 논의되었다. 소련과 폴란드의 국경선으로는 영국의 외무장관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가 1920년에 제의했던 커즌선에 기반하여 폴란드의 동쪽 일부 영토가 소련의 영토로 편입됨에 따라 3개국 정상은 편입된 만큼 독일의 영토 일부를 폴란드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물론 테헤란회담에서는 독일의 분할문제와 독일의 동부지역 일부를 폴란드에게 넘겨주는 문제가 논의는 되었지만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테헤란회담 이후 미국에서는 독일에 의한 전쟁이 불가능하도록 독일

3) <http://cafe.daum.net/eurohc/P2zN/16?q=%ED%85%8C%ED%97%A4%EB%9E%80%ED%9A%8C%EB%8B%B4%20%EB%8F%85%EC%9D%BC> (검색일: 2020/10/03).

을 전면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계획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1944년 미국의 재무장관인 모겐소(Henry Morgenthau Jr.)는 전후 독일에 대한 여러 초치가 담긴 ‘독일의 항복 이후 계획안(Suggested Post-Surrender Program for Germany)인 ‘모겐소플랜(Morgenthau Plan)’을 작성하였다(이규하 1980, 269-271). ‘모겐소플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비무장화: 연합국의 목표는 독일의 항복 이후 최단 시간 내에 독일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독일군과 독일인의 완전한 무장해제(모든 전쟁자료 제거 및 파괴 포함)를 넘어서 모든 독일 군수산업의 완전한 파괴와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기타 주요산업의 파괴 또는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독일의 분할: 소련이 흡수하지 않은 나머지 동프로이센 지역 및 실레시아 남부지역은 폴란드가 할양받는다. 프랑스는 자르지역과 라인강-모젤강으로 둘러싸인 인접 영토를 할양받는다. 루르지방 및 주변 공업지대를 포함한 지역은 유엔에서 설립될 국제안보조직이 통치하는 국제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독일의 남은 지역은 2개 자치독립국으로 분할하여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덴 및 인근 지역은 남독일국으로, 프로이센지역과 작센, 튀링겐 및 인근 지역은 북독일국으로 만든다. 신생 남독일국과 오스트리아의 국경은 정치적 국경을 1938년 이전 국경으로 하는 대신 관세동맹을 맺게 한다.”⁴⁾

모겐소플랜은 독일의 일부 지역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독일의 산업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여 농업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1944년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의 퀘벡에서 열린 미국 루스벨트와 영국 처칠의 회담에서 가서명되었으나 전후 독일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는 양국 내의 반발에 따라 추후에 서명이 철회됨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

4) https://ko.wikipedia.org/wiki/%EB%AA%A8%EA%B2%90%EC%86%8C_%ED%94%8C%EB%9E%9C (검색일: 2020/10/03).

테헤란회담을 전후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전후 독일의 분할논의는 미국에 의한 5+2분할, 영국에 의한 2개국 분할 등이 제기되었지만 확정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세부사항을 유럽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⁵⁾ 1944년 7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된 유럽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3+1로 독일을 분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독일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미국, 영국, 소련이 하나씩 맡아 통치하고, 베를린지역은 3개국이 공동통치하는 방식으로 분할 점령하자는 것이었다.

2. 알타회담에서의 독일문제

1943년 10월의 모스크바 3개국 외상회의에서 합의된 것이 의거하여 1944년 1월 런던에 유럽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유럽자문위원회는 1944년 7월 25일에 독일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전후 독일에 대한 분할 점령을 권고라는 전후 처리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연합국에 제출하였다. 유럽자문위원회는 주요 임무는 종전 이후 독일의 분할점령문제와 점령지를 통치할 연합국 통제기구의 설립문제를 협의하는 것이다.

유럽자문위원회는 1944년 9월 12일에 ‘독일 점령지역과 대베를린 행정에 관한 의정서(런던의정서)’에 가서명하고, 11월 14일에는 ‘점령 독일을 통제할 기구 설립에 관한 런던협정’에 대해 의결하였다. 런던의정서는 점령지 간의 경계선을 결정하고, 베를린에 4개국 공동점령지구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 런던협정은 연합국통제위원회(Allied Control Council)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협정인데, 이 연합국통제위원회는 전독일에 대한 통일적인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런던의정서에서 제기된 독일의 점령지역에 대한 분할안 합의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김학성 2002, 60-61). 미국, 영국, 소련이 1944년 9월 12일에 가서명한 런던의정서에서 전쟁이 끝나면 분할 점령해야 하

5) 테헤란회담에서 소련의 스탈린은 독일을 여러 조건의 부분으로 분할할 것을 원하였으며, 영국의 처칠은 프로시아를 독립국으로 만들어 독일의 남부 지역을 다뉴브 연방의 일부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는 독일의 영토에 대한 기준점은 1937년 12월 31일로 확정하였다. 그 이유는 히틀러가 1938년 3월에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병합했고, 9월에는 슈데텐 지역을, 그리고 1939년 3월에는 메멜 지역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를 독일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첫째, 소련이 점령할 지역 안에 있는 베를린은 미국, 영국, 소련이 나누어 점령한다. 둘째, 독일의 동부 지역은 소련이 점령한다. 셋째, 독일의 북서 지역과 남서 지역은 어느 나라가 점령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영국과 미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11월 14일에 합의가 이루어졌다.⁶⁾ 영국은 쾰른 및 함부르크 등이 있는 북서 지역을 점령하고, 미국은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뮌헨 등이 있는 남서 지역을 점령한다. 단, 미국이 점령하기로 한 북서 지역은 항구가 없는 점을 고려해 영국의 점령지역 내에 있는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항구 등 필요한 주변지역에 대해 미군사령관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런던의정서에 따라 영국, 미국, 소련 간에 독일의 분할 점령지역에 대한 합의가 성사된 후 각각의 국가는 비준절차에 돌입하였다. 영국은 1944년 12월에 비준하였고, 미국은 독일의 산업지역인 루르 지역을 영국에 넘기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1945년 2월 1일에 런던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소련은 2월 6일에 비준하였다. 이에 런던의정서는 1945년 2월 6일에 발효되었다.

한편, 1944년 11월 14일의 런던협정은 미국, 영국, 소련의 점령국사령관이 점령 지역 내에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고, 독일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런던협정에 따라 3개국은 독일 점령지역을 통치할 최고기구인 '연합국통제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연합국통제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전체 독일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통일적인 점령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연합국통제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하였다. 특히, 연합국통제위원회는 전체 독일의 문제가 어느 한 점령 당사국이 뜻하는 바와

6) 영국과 미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1944년 9월의 퀘베크담(Quebec Conference) 이후 점령지 선택에 관해 두 나라는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르게 될 경우에, 각국은 점령 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향후 피점령국으로서 독일의 앞날이 험난하게 전개되도록 하였다.

런던의정서와 런던협정에 따라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은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에서 얄타회담(Yalta Conference)을 개최하였다. 당시 이탈리아가 1943년에 항복한 상태였고, 독일의 패전도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얄타회담은 이전의 회담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의 루스벨트는 얄타회담에서 독일문제 해결 외에도 소련의 조속한 대일참전 유도과 새로운 평화기구인 국제연합에 소련을 가입시키고자 하였으며, 중부와 남동부 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얄타회담에서 영국의 처칠은 서부 유럽에서 영국 단독으로 독일을 상대하기가 어렵다면서 프랑스도 독일의 한 지역을 점령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합국통제위원회에도 가입시키자고 제의하였다. 처칠의 프랑스 참여 제의는 향후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소련을 상대로 독일문제와 유럽문제를 협의할 경우에 프랑스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영국의 프랑스 참여 제의에 소련의 스탈린은 프랑스가 독일의 서부 지역을 노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참여를 반대하였지만, 미국의 루스벨트가 프랑스의 참여에 찬성하자, 스탈린은 프랑스의 점령지역이 영국과 미국이 점령할 지역 내의 일부를 차지하는 조건이라면 프랑스의 참여를 수용하겠다고 양보함으로써 영국과 미국이 스탈린의 의견을 받아들여 프랑스가 독일 점령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합국통제위원회에도 가입하였다.

미국, 영국, 소련은 1945년 2월 11일의 얄타회담에서 전쟁이 끝나면 독일을 나누어 점령하기로 하고, '만일 프랑스가 점령지 하나를 인도받

7) 1944년 12월에 프랑스의 드골(Charles de Gaulle)이 소련과의 우호조약체결을 위해 소련을 방문했을 당시 스탈린이 오데르-나이세선을 독일의 동부 국경선으로 설정하자고 제의하자 드골은 스탈린에게 라인강 선을 장래 독일의 서부 국경선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의한 적이 있었다.

고, 연합국통제위원회에 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길 원한다면, 3개국이 초청'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월 11일의 알타의정서에서는 '프랑스가 점령할 지역은 영국과 미국의 점령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범위는 영국과 미국이 프랑스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프랑스는 알타회담의 결정에 1945년 5월 1일에 런던협정에 가입하였으며, 독일분할에 관한 런던의정서에는 독일이 항복한 이후인 1945년 7월 25일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는 알타회담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한 지역을 점령하고, 독일 점령지 통치문제를 다룰 연합국통제위원회에도 가입하여 전후의 독일문제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정기동·정남기 1988, 41;이규하 1999, 120-123).

결국 알타회담은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 런던의정서와 런던협정을 통해 전후 독일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다.⁸⁾

첫째, 독일을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4개국이 분할하여 점령한다. 둘째, 독일의 군수산업을 폐쇄하거나 몰수한다, 셋째, 연합국은 독일인에 대해 최저생계를 마련해 주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의무를 가지지 않기로 합의한다. 넷째, 전쟁의 주요 전범들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릴 국제재판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다섯째, 전후 배상금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하기로 하였다.

3. 알타회담 이후 독일문제

유럽에서 독일군은 1945년 4월 29일에 이탈리아에서 항복하고, 5월 7일에 랭스에서 공식 항복문서에 서명하였으며, 5월 8일에 베를린에서 소련군에 항복함으로써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다. 이에 연합국은 1945년 6월 5일 '독일의 패전과 독일에 대한 최고통치권 인수에 관한 선언(베를린선언)'을 발표해 향후 독일은 연합국의 통치권에

8) https://ko.wikipedia.org/wiki/%EC%96%84%ED%83%80_%ED%9A%8C%EB%8B%B4 (검색일: 2020/10/03).

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⁹⁾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포츠담에서는 1945년 5월 9일에 독일이 항복하자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의 트루먼, 처칠(애틀리, Clement Attlee), 스탈린이 전후의 독일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하였다.¹⁰⁾ 포츠담회담(Potsdam Conference)은 전후 독일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그에 앞서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핀란드 등과의 강화조약체결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외무장관위원회 설치, 독일문제, 쾨닉스베르크와 그 인접지역문제, 전쟁범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문제, 독일인들의 이주문제들을 협의하였다.¹¹⁾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 정상들은 알타회담에 따른 알타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포츠담회담에 대한 결과 보고서인 ‘베를린 3자회담 결과 보고서(포츠담협정)’을 8월 2일에 채택하고, 종결하였다. 포츠담협정은 독일의 점령 목적과 점령 기간 중 독일통치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포츠담협정에서 연합국의 독일점령 목적은 독일의 무장해제, 비군사화, 비나치화, 민주화에 있음을 명시하고, 특히 독일산업의 비군사화에 중점을 두었다. 포츠담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²⁾

첫째, 포츠담협정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이 각각 1개 구역씩, 마찬가지로 베를린과 빈은 수도라는 위상을 고려해 4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점령한다.

둘째, 포츠담협정은 독일의 전쟁도발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독일에

9) <http://kyoposhinmun.de/speziell/2020/06/15/5566/> (검색일: 2020/10/03).

10) 포츠담회담 기간 중 영국은 총선에서 노동당의 애틀리가 승리하여 7월 28일부터는 처칠을 대신하여 참석하였으며, 미국은 루스벨트가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하자, 트루먼(Harry S. Truman)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미국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에 스탈린만이 유일하게 계속 참석하게 되었다.

11) 1945년 5월 9일에 소련의 스탈린은 모스크바 승전 연설에서 독일분할에 대한 유보입장을 보이면서 독일에 군대없는 중립적인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포츠담회담에서 거부당했다(정용숙 2016, 75-76).

12) <https://namu.wiki/w/%ED%8F%AC%EC%B8%A0%EB%8B%B4%20%ED%9A%8C%EB%8B%B4#n-3> (검색일: 2020/10/03).

서 탈나치화, 비무장화, 민주화, 비중양집권화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포츠담협정은 독일이 이웃나라를 침략하거나 세계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독일의 군사주의와 나치주의를 제거하기로 하였다(황선혜 2004, 142). 히틀러의 나치, 나치와 관련된 모든 조직을 파괴하고 나치시대의 각종 제도를 철폐시켜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조직과 제도가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단속하고자 하였다. 포츠담 협정은 점령 기간 중 독일 전체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취급하기로 하였으며, 독일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도록 군수산업을 철거하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물품의 생산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하였다. 즉, 독일을 철저히 무장해제하고, 모든 군사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군수품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산업시설을 철거하거나 통제하여 독일을 경공업 혹은 농업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셋째, 포츠담협정은 독일 국민을 멸망시키거나 노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독일 국민에게 그들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하였으며, 나치의 무모한 전쟁 등으로 인해 독일경제가 파탄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독일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관계에서 평화협력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넷째, 포츠담협정은 독일로 하여금 전쟁 중에 연합국에 끼친 손해와 고통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의 배상을 하도록 대략 203억 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연합국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3개국은 점령지역 내 산업시설의 철폐와 독일이 해외에 갖고 있는 재산으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였다. 소련은 자신의 점령지역 내의 배상 이외에 서방 점령지역으로부터 독일의 평화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산업자본시설의 15%를 식량, 석탄, 석유 제품 등과 같은 가격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련은 점령지역으로부터 독일의 평화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산업시설의 10%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받기로 하였다(노명환 2005, 257-259).

다섯째, 포츠담협정은 독일의 영토변경에 관해 합의하였다. 미국, 영

국, 소련 등 3개국은 동프로이센의 쾨닉스베르크시와 그 주변 지역을 장래 강화회담에서 영토문제가 확정될 때까지 소련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폴란드의 서부 국경선의 최종적인 확정은 강화회담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지만 폴란드의 서부 국경이 확정될 때까지 발트해에서 스비네문데 서쪽으로 또는 이곳에서 오데르강을 따라 나이세강 서쪽 입구를 지나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잇는 선의 동부 지역과 소련의 관할 아래에 들어가지 않은 동프로이센 지역을 폴란드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즉, 오데르강과 나이세강 동부 지역을 폴란드에 편입시킨 것이다(한수경 2018, 73-74).

포츠담회담 당시 스탈린은 영국의 애틀리에게 오데르-나이세강 선을 폴란드의 항구적인 서부 국경선으로 승인하자고 주장하였지만 애틀리는 이 문제를 장래의 강화회담에서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오데르-나이세강 선의 동부 지역을 폴란드가 관할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결정은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오데르-나이세강 선의 독일 동부 지역에 관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선,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이 지역이 폴란드에게 넘겨진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폴란드 의회는 1949년 1월에 이 지역을 폴란드의 관할지역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동독은 건국 직후 오데르-나이세강 선이 평화의 국경선이라며 승인하여 1950년 7월 6일 폴란드와 체결한 괴를리츠조약(Treaties of Görlitz)에서 오데르-나이세강 선이 폴란드와 독일간의 상호 불가침의 평화와 우호의 국경선이라고 승인하였다. 반면에, 서독을 비롯한 서방진영은 포츠담협정이 문제의 지역을 폴란드에게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니고 최종결정은 강화조약에 위임했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독일은 정부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츠담협정은 강화조약의 기본적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서독은 독일의 동부 국경선과 동부 지역의 분할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한편, 포츠담협정으로 폴란드와 소련의 관할에 편입된 독일의 영토는 동프로이센, 쉴레지엔, 포메른,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의 일부 지역인데,

그 지역의 면적은 1938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할 때 독일의 전체 면적에서 24%나 되었다.¹³⁾

또한 포츠담협정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을 강제로 독일로 이주하도록 규정하였다. 포츠담협정에서는 ‘독일인의 이주가 합법적이고, 인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달랐다. 포츠담협정으로 인해 오데르-나이세강 동부 독일 지역에 거주하던 약 560만 명의 독일인들이 강제로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 거주하던 독일인들도 강제로 독일로 이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 후 1950년까지 서부 지역에서 약 798만 명이, 동부 지역에서 약 450만 명의 독일인들이 이주하였다(권영설 2006, 101).

위에서 살펴 본 포츠담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 차례의 진행된 연합국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문제에 대한 회담에 참여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향후 독일의 점령문제가 많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노정하고 있다.

Ⅲ. 미국과 소련의 대립구도와 독일의 분단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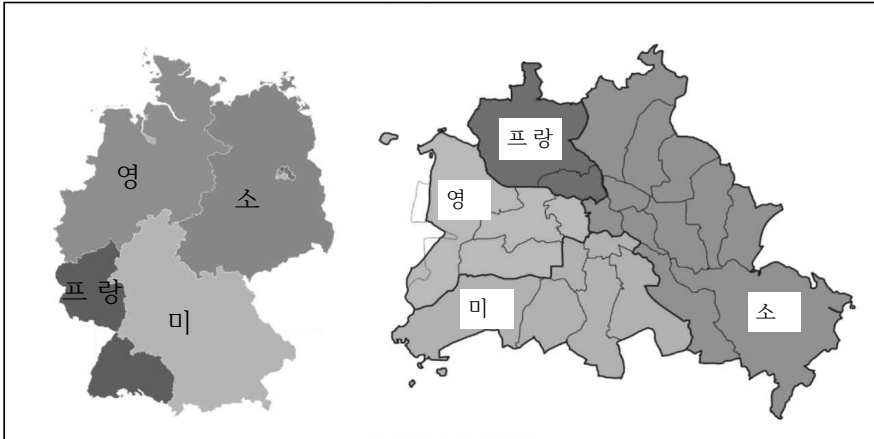
히틀러의 나치독일이 1945년 5월 8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포츠담회담이 전후 독일 점령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개최되었다. 포츠담회담은 포츠담회담 이전의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합의한 독일 점령지역의 처리방안을 재확인한 것이다. 포츠담협정에 의해 연합군들은 독일을 4개 점령지역으로 분할하였다. 독일의 4개 점령지역은 남서부의 프랑스군 점령지, 북서부의 영국군 점령지, 남부의 미국군 점령지, 동쪽 오데르-나이세강까지 지역의 소련군 점령지로 나누어졌다. 포츠담협정에서는 이 4개 점령지

13) 이 지역은 독일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해 왔었기 때문에 독일문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이었다. 특히, 쉴레지엔은 독일 전체 석탄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전후 독일재건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를 ‘독일 전체(Germany as a whole)’로 불렀으며, 4개국 연합군은 독일 지역 내 각 점령지들의 통치권을 행사하였으며, 독일 전체의 동쪽에 있는 (구)독일 영토는 폴란드와 소련에게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권오중 2007, 26).

또한 연합군은 독일의 항복 선언에 따른 독일의 무정부상태를 방지하고자 1945년 6월 5일부터 4개국에 의해 점령통치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독일의 행정권과 통치권은 연합군에게 이양되었다. 그 당시 4개국의 관할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과 미국의 관할지역은 베스트초네(Westzone)로, 프랑스의 관할지역은 트리초네(Trizone)로, 소련의 관할지역은 오스트초네(Ostzone)로 불리었다.

<그림 1> 포츠담협정에 의한 연합국의 독일점령 관할지역



출처: <https://blog.naver.com/leaguide/221315121303>(검색일: 2020/10/03).

주) 왼쪽은 독일전역에 대한 분할점령이고, 오른쪽은 베를린지역 분할점령이다.

한편, 1948년과 1949년 사이에 소련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라 장악했던 서베를린의 관할권을 포기하도록 봉쇄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미국과 소련은 양국의 합의하에 독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49년 5월

23일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 서방 연합군 점령지역에 수립되어 1955년 5월 5일에 완전한 주권을 선언하였다. 한편, 1949년 10월 7일에는 독일민주공화국(동독,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 소련군 점령지역에 수립되어 독일은 분단국가가 되었다. 서독은 자유시장경제체와 의원내각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국가가 되었으나 동독은 인민민주주의체제를 표방하였지만 소련의 정치적, 군사적 통제를 받는 사회주의 위상국가가 되었다(이호근 2020, 118).

1. 독일연방공화국의 성립과정

1948년 4월부터 6월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개국 등 6개국은 2차례에 걸쳐 종전에 따른 전후 독일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국의 런던에서 회담을 가진 후 런던선언을 채택하였다. 특히, 제2차 런던회담(1948년 4월20일~6월 2일)을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은 독일인에게 장래 통일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를 수립하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이규하 1980, 291-292).

첫째, 각 점령사령관은 각 주정부의 총리에게 1948년 9월 1일까지 헌법제정을 위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한다.¹⁴⁾ 둘째, 서부 점령지역의 유럽경제와의 통합과 루르지역 통제에 독일인의 참여를 요청한다.¹⁵⁾ 셋째, 서부 점령지역의 안전에 관한 기관 창설 등을 요구한다. 서독의 정부수립에 관한 소련의 반응은 1948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바르샤바 8개국이 회담을 한 후 런던회담이 독일분단을 획책하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포츠담선언에 따른 오데르-나이세선을 포함한 평화조약체결과 민주적 통일정부의 구성을 촉구하였다.

14) 서독의 단독정부수립에 대하여 프랑스의 의회는 처음에 부정적이었으나, 소련의 베를린봉쇄정책으로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자 의회에서 비준하였다(김진호 2014, 255).

15) 독일의 석탄생산지인 루르 지역과 자르 지역은 국제 감시체제를 통해 견제하고자 하였다. 자르 지역은 프랑스 관할 하에, 루르 지역은 국제 감시체제에 두기로 하였지만 루르 지역의 국제 감시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1948년 6월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은 새로운 화폐, 마르크화(DM)를 3개의 서부 지역에 통용하기로 합의하는 통화개혁을 실시하자 소련은 제2단계 베를린봉쇄로 맞대응하였다.¹⁶⁾ 제2단계 베를린봉쇄는 통화개혁에 따른 강화된 소련의 조치이며, 서독의 정부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으로 전쟁위협도 제기되었으나 미소 간의 비밀협상을 통해 베를린봉쇄는 해결되었다.

1948년 7월 1일에는 런던선언에 따라 작성된 ① 민주적, 연방주의적 헌법을 제정할 것, ② 주정부의 경계선 획정 및 변경사안을 제안할 것, ③ 점령조례의 기본원칙을 확정시킬 것(장래 서독정부와 연합국의 관계를 설정할 것) 등 3개의 ‘프랑크푸르트문서’가 3개국 점령군 사령관으로부터 독일 주정부 총리들에게 이관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응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권오중 2006, 44; 이규하 1980, 292-295).

첫째, 1948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코브렌츠(Koblenz)회담이다. 이 회담의 참석자들은 문서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첨예한 의견을 보였다. 회담 당시의 쟁점사안은 임시정부의 구성, 헌법 대신 기본법의 제정, 주정부의 새로운 구성, 점령 조례 등이었다. 여기에 독일 각 정당의 지도부와 주총리와의 의견차이도 분명히 나타났다. 코브렌츠회담은 점령사령관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지만 그들은 점령국들 간의 공조 정책에 합의하고, 독일인에게 헌법제정 대신 기본법의 제정과 임시적 통일정부 구성을 위한 제헌의회의 구성을 허용하였다.

둘째, 1948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니더발트(Niederwald) 회담이다. 연합국은 연락장교를 동원하여 독일과 막후접촉을 진행하면서 니더발트회담에서 결의한 독일의 임시정부구성 방침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였다.¹⁷⁾ 이에 따라 프랑크푸르트문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헌법제정심의위원회가 헤른킴제(Herrnchiemsee)성에서 1948년

16) 제1단계 베를린봉쇄는 1948년 3월 20일의 제1차 런던회담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소련은 베를린의 기존 수송 및 교통통로를 모두 폐쇄하여 여행자를 통제하는 증명서가 발급되고, 수송도 허가제로 통제되었다.

17) 당시 베를린시장 Reuter는 임시정부구성은 주권의 점진적 확보를 위한 행보라고 해석하였다.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서독기본법의 기준으로 연합국이 제시한 연방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채택되었다.

셋째, 1948년 9월 1일에 제헌의회(Parlamentarischer Rat)가 구성되었다. 1948년 9월 1일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회가 소집되었으며, 제헌의회는 11개 주정부의 대표 65명으로 구성되었다.¹⁸⁾ 제헌의회 의장에는 아데나워(K. Adenauer)가 선출되어, 각 정당이 제시한 의견들은 협의가 가능하였다. 그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의 서독정부 구성 원칙은 상이하였다. 미국은 미국식 연방국가원칙을 주장한 반면에 프랑스는 느슨한 국가연합을 원하였다. 영국은 중앙집권적 정부구성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연방국가원칙과 루르지역에서의 독일인 참여 등을 고수하였으나 프랑스와 영국의 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독일의 헌법제정방향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결국 연합국은 1949년 5월 23일에 서독기본법을 수용해 독일연방공화국이 성립되었다. 1949년 8월 14일에 실시된 제헌의회선거결과, 기민기사당은 31%, 사민당은 29.2%, 자민당은 11.9%, 공산당은 5.9%, 군소정당은 5%의 지지율을 확보하였다(박성조·양성철 1991, 167).

2. 독일민주공화국의 성립과정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성립은 소련의 유럽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소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의 서부 독일정책에 대한 대응과 체계적인 동독의 성립을 준비하였다. 종전 후 소련의 유럽정책은 3가지 전략에 근간하여 추진되었다. 첫째, 서방세력에 대항하는 직접병합지역으로 발트3국¹⁹⁾,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동 폴란드의 지역이다. 둘째, 간접지배지역으로 인민 민주주의의 허리띠 역할을 해주는

18) 제헌의회 구성을 보면, CDU(기독교민주당)·CSU(기독교사회당)·SPD(독일사회민주당)는 각각 27명, FDP(자유민주당)·DVP(독일민족당)·LPD(독일자유민주당) 각각 5명, ZDP(독일중앙당)·KPD(독일공산당) 각각 2명, 옵저버 자격의 Berlin대표는 5명이었다(박성조·양성철 1991, 167).

19) 발트3국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이다.

동심원적 포위망에 의한 지배지역인데, 여기에는 동유럽의 스탈린화 작업지역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동독 등을 포함한다. 셋째, 완충지역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중간지역인 스칸디나비아, 중유럽, 서발칸 지역이며, 여기에 소련에 우호적인 독일 통일국가도 포함한다. 이에 소련의 독일정책의 목표는 독일 전 지역에서 소련에 우호적인 통일정부수립과 루르 지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었으나 실패하였다. 사실 동독 지역은 소련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인민민주주의 지대보다는 완충지역에 포함되었다(김수자·오향미 2008, 89).

1944년 10월에 모스크바로 망명한 독일공산당의 대표들은 “민주주의 불력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민주적 토지개혁, 기간산업의 사회주의화, 노동자 통합 등을 결의하였고, 1945년 6월 12일에 독일공산당의 빌헤름 피익(Wilhelm Pick)과 발터 울부리히트(Walter Ulbricht) 등은 새롭게 독일공산당(KPD)을 출범시켰다. 당시에 이들은 독일에 소련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하면서 반파쇼적 민주정권과의 의회적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1945년 6월 15일에 동독 지역에 사민당(SPD)이 재창당되었으며, 이들은 독일공산당보다 더 급진적인 정강을 채택하였고, 이들은 소련 군정의 적극적 지지세력으로 안착한 후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독일공산당과의 합당 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소련은 1946년 4월 22일에 독일통일당(SED)을 창당시켜 사민당(SPD)과 독일공산당(KPD)을 강압적으로 통합시켰다(권형진 2014, 204). 당시 대부분의 동독 정당인은 동서 사이에서 독자노선의 유지와 블록정당화에 반대하였다. 동독의 정당인들이 대부분 민족주의적 노선을 강조하며, 동서진영의 교량역할과 독일 중립화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1947년 11월 독일통일당(SED)은 서독에서의 변화를 의식하여 ‘통일과 정당한 평화를 위한 독일 인민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는 1947년 런던회담의 실패에 따른 소련의 조치로 동독에서의 인민회의는 동독 의회의 전 단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1947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처음 개최된 인민회의 참석자는 2,225명이었다. 인

민회의는 소련당국이 소련에 우호적인 비정치적 인사를 대거 동원하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독일의 민족적 정통성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이후 동독 지역은 소련의 의도대로 동독 정부구성을 위한 인민의회운동이 계속 강화되었다.

1948년 3월에 개최된 제2차 인민의회에서 독일인민협의회(Deutschen Volksrat)가 발족되었고, 독일인민협의회는 400명(형식적으로 100명은 서부지역 대표자를 포함)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일헌법을 제정·심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10월까지 ‘헌법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였으며, 헌법위원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을 출범시키는 의결기관이 되었다.

1949년 5월 제3차 인민의회를 거쳐 독일인민협의회는 1949년 10월 7일에 헌법안 통과시키고, “민주적 독일의 민족전선”으로 개칭되었으며, 그 임무로 반파시즘적 민주블록의 체계화를 통한 임시적인 인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하는 것이었다(김현식 2006, 303). 이에 따라 1949년 10월 9일에 공산주의 체제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되었다.

IV. 결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에 의해 패전한 독일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분단되었다. 당시 독일의 분단은 강한 독일이 주는 위협요인을 해소하고자 소련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전후과정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 등도 독일의 약화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분할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 점령분할과정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민주주의세력에 의해 소련의 동유럽 위성국가전략에 따른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사회주의국가화에 대응하고자 민주주의에 기반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을 건설하면서 분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후처리과정에서 정치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블록화 현상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서방진영을 축으로 하는 민주주의세력(자본주의)과 소련과 동유럽을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으로 재편되면서 동서냉전체제를 겪게 되었다. 동서냉전체제의 구축은 전쟁의 패전국인 독일과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에 있어 분할 점령과 분단이라는 인위적 산물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독일분단의 원초적인 원인은 강한 독일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하려는 연합국들의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하였으나, 전후처리과정에서 볼 때 세계의 세력재편과정에서 강대국들의 패권안정화가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분단이 정치이데올로기의 블록화 현상이 만든 산물로 인식되는 것은 독일통일이 미소 간의 블록화인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시점에 성사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소련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면, 이는 블록화의 당사자인 소련과 미국의 통일독일의 인정이 통일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물론 분단독일이 통일독일이 되기까지는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와 같은 통일을 위한 모델과 제안이 끊임없이 토론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독일통일은 독일분단을 계획한 이해당사자들이 독일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따라서 독일분단과 통일독일이라는 관점에서 분단한국이 통일한국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한반도의 분단에 참여한 이해당사국들의 협조가 전제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영설. 2006. “분단과 통일 속의 독일국적법과 그 헌법문제.” 『중앙법학』 제8집 제4호, 101.
- 권오중. 2006. “분단현상유지에 대한 저항인가, 순응인가?-전후 냉전질서의 형성과 베를린 선언.” 『국가전략』 제12권 4호, 44.
- 권오중. 2007. “독일과 한국의 분단과 통일문제의 구조적 차이와 양국 정부가 추진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한계에 대한 연구.” 『독일연구』 제14호, 26.
- 권오중·나인호. 2006. “독일의 분단과 통일 그리고 한국문제의 현실.” 『한국독일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49.
- 권형진. 2014. “분단과 독일인의 국민자격 변화의 역사적 고찰-전후 재통일까지의 동서독 국적법 중심으로.” 『독일연구』 제27호, 204.
- 김수자·오항미. 2008. “근대국가 건설기 민족주의의 변형과 굴절-한국과 독일에서의 분단 극복과 민주국가 수립의 충돌.” 『이학사학연구』 제36집, 89.
- 김진호. 2014. “독일문제와 제1차 베를린 위기-미소의 독일정책과 통화개혁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제130권, 255.
- 김학성. 2002. “독일의 통일문제와 국제정치.”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60-61.
- 김현식. 2006. “독일의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법적 논의.” 『서강법학』 제8권, 303.
- 노명환. 2005. “동-서 유럽의 분단과 마셜플랜(Marshall Plan)의 기원에 대한 논쟁의 검토-소련과 미국의 동유럽 지역과 독일문제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제14권 1호, 257-259.
- 박성조·양성철. 1991. 『독일분단과 분단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67.
- 이규하. 1980. “제2차 세계대전후의 독일분단.” 『전북사학』 제4집, 269-295.
- 이규하. 1999. “독일의 분단-전독기구를 위한 노력과 서독정부의 수립.” 『서양사론』 제21·22집, 120-123.
- 이호근. 2020. “독일 통일 30주년과 분리통합에 대한 연구-독일의 전후 분리와 통합의 동학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32권 3호, 118.
- 정기동·정남기. 1988. “한국과 독일의 분단에 관한 고찰.” 『현대이념연구』 제3권, 38:41.
- 정용숙. 2016. “독일문제는 해결되었는가-독일문제의 과거와 현재.” 『역사와 세계』 제50권, 75-76.

한수경. 2018. “70년 분단의 디아스포라와 평화, 통일의 꿈-독일분단과 통일로 본 한반도.” 『정치와 평론』 제23권, 73-74.

황선혜. 2004. “독일 소련군정기(1945-1949)의 교육정책과 소련점령지역의 독일인 선전조직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 제31권 2호, 142.

<http://cafe.daum.net/eurohc/P2zN/16?q=%ED%85%8C%ED%97%A4%EB%9E%80%ED%9A%8C%EB%8B%B4%20%EB%8F%85%EC%9D%BC>(검색일: 2020/10/03).

<https://blog.naver.com/leaguide/221315121303> (검색일: 2020/10/03).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C%84%9C%EC%96%91_%ED%97%8C%EC%9E%A5(검색일: 2020/10/03).

https://ko.wikipedia.org/wiki/%EB%AA%A8%EA%B2%90%EC%86%8C_%ED%94%8C%EB%9E%9C(검색일: 2020/10/03).

https://ko.wikipedia.org/wiki/%EC%96%84%ED%83%80_%ED%9A%8C%EB%8B%B4 (검색일: 2020/10/03).

<http://kyoposhinmun.de/speziell/2020/06/15/5566/>(검색일: 2020/10/03).

투고일 : 2020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20년 11월 27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5일

* 정태일은 충북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주요연구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검토-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판적 분석”, “기회균등 관점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인권의 위기의식 분석” 등이 있다.

* 김연희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역사적 제도주의를 통한 민주화 이전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분석”이라는 정치학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Abstract>

Review of the Origin of the German division : Focusing on before and after the Yalta Conference

Chung, Tae-Il · Kim, Yeon-Ho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growth of modern nation-state has led to the expansion of power to supply raw materials and develop markets. Under such circumstances, competition for supply of raw materials and market development was inevitable between th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and the later industrial countries. World War II was initiated by Germany, Japan, and Italy, whose capitalist system had not matured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in a situation where the world economy collapsed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his study was divided into Germany during the post-World War II process, and discussions on the origins of the German division were analyzed through international conferences at that time. The division of Germany was first raised by the Soviet Union in an effort to solve the threat of strong Germany, but was confirmed through the Tehran and Potsdam conference before and after the Yalta conference for the post-war treatment of World War II. The cause of the German division was the political intention of the Allied Powers to eliminate the strong threat to Germany, but it can be said that the stabilization of the hegemony of the great powers in the post-war process was more important.

Keywords : Tehran Conference, Yalta Conference, Potsdam Conference, European Advisory Commission, Allied Control Council